

통일 칼럼

### 한반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 승인했다.

지난 8월 이후 60여 일 만에 다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약 87분간 이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와 안보를 한 틀에 묶는 이른바 '패키지 딜'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안보라는 프레임과 경제라는 프레임을 모두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바구니에 같이 담아서 연계해서 풀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 영역과 경제 영역을 섞음으로 인해서 마치 거래적 측면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우리의 자강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동등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 SSBN이 아니라, 원자력, 핵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SSN을 뜻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이론상 무한대로 잠수할 수 있어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한 작전을 펼 수 있다.

우리나라는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만큼 잠수함 기술

강국인 데다, 소형 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들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운용하려면 농축 우라늄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군사 목적의 핵연료 활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여기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공식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이 한국의 요구를 전격 승인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자주 국방이라든가, 자율성의 확장이라든가,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핵 잠재력이라든가 핵무장과 관련된 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핵 비확산 체계를 균열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변 국가의 군비 확장이라든가 또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아닌 미국 내 필리핀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록 잡어 이야기한 것도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 경우 미국 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가져오는 형식이 될 텐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이 한국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사설

#### 초코파이 사건 질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초코파이 절도로 송치했다."

5만원 식료품은 수감대신 영양수액을 줬다"면서 "1050원 초코파이는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경찰이 손들어 준 것이다."

내용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060원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언제 원리원칙 따졌다고 하나, 왜 청주 경찰과는 (이렇게) 다르게 대응하냐"며 "이렇게 대응 다르게 하는 게 맞다. 내용을 수사하면 알겠지만 이거 하청 노동자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원래 범죄자 잡는 수사자만 그 방향에는 사람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사건 할 때 충분히 좀 고려 숙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문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 전주 창고형 약국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서 국내 최초로 창고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한 뒤 전북에도 약 600㎡(200평) 규모로 처음 문을 열었다.

약사를 통해 의약품을 건넬 때는 기존 약국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근육통', '임신' 등이라고 적힌 진열대로 가 원하는 약을 소량하듯 구매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모든 약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아직 약이 채워지지 않아 텅 비어있는 매대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 개의 약을 든 채 성분을 비교해보거나, 함께 온 지인과 의논하며 약을 고르는 손님들도 있었다. 물론 창고형 약국도 약국인 만큼 약사도, 조제실도 있다. 처방전 조제와 복약지도 모두 가능하다. 이곳 대표약사는 "하루에 400~500명 정도가 방문했다. 물건을 채우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기존 약국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업계가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창고형 약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약 때문에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약을 오남용할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간 약국들이 유사한 가격으로 의약품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을 구매할 기회를 잃어왔다"며 "창고형 약국을 흡집 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복약지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독자제언

#### 청소년 전동 킥보드, 어른들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때

최근 인천에서 2살 딸을 지키려던 어머니가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어 의식불명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성인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증가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고 위험 또한 커졌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117건에서 2386건으로 20배가량 늘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만 약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55명, 부상 5570명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으로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6세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PM 공유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 버튼이 있지만 '다음에' 또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간단한 인증 절차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무면허 운전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운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지

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영영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차, 무면허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 하거나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제도가 마련되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도 인도주행,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며, 인천 계양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차와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해 인도에 세워진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결국 일부 업체는 철수를 하게끔 만든 좋은 사례도 있다.

전동 킥보드의 학생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인명피해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어린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경찰에서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어린 학생들은 물론보행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서윤 교항경찰서 흥덕파출소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